

인력난 숨통 외국인 근로자 월 1만명 입국

고용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보고

구인난 지표 '빈일자리' 23만개...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원"

정부가 조산업,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8만4000명 입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구인난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중장기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조산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인난의 대표적인 지표로, 한 달 이내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수를 뜻하는 '빈 일자리 수'는 올해 6월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한 6월 기준 구인 수도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업 8300명, 조산업 4800명 등으로 많았다. 농업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80% 이상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구인난의 원인으로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원을 꼽았다.

이정환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들은 내국인들이 취업 기회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정부는 그간 외부 인력을 통해 이를 지원했는데 코로나19로 입국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3100명, 조산업 400명, 농축산업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2019년 대비 약 35%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또 방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외국인력 업종별 쿼터를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부분도 현장의 실제 수요에 미달하는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고용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면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전체(외국인력) 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2019년 수준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외국인력 쿼터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신규 쿼터 6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축산업도 신규 쿼터 600명을 늘리며, 이달 중 신규 쿼터 추가 확대에도 나선다.

조산업은 전문인력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응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통상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는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2000명) 및 하반기 발급 예정자(2만1000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속 입국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5만명은 이달부터 월별 1만명씩 들어오게 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한 연내 8만4000명 입국을 추진, 올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26만4000명)를 2019년말(27만7000명)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를 올해 10월 중 조기 확정하고,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단력배정분)를 새롭게 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산업과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데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지원 방안이 내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 구인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국인 근로자 총원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도 외국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다시 신속히 채워겠다는 것"이라며 "내국인이 해당 업종에 잘 갈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산업 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나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가느냐가 근본 대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체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는 만큼 원형정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거공사 따줄게" 뒷돈 챙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브로커 실형

징역 2년·추징금 3억 7000만 원 선고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배경으로 꼽히는 계약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이권에 개입한 문홍식씨와 공모,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기업·다원이엔씨·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6억 4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포함한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계약 비위로 철거 공사비가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도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

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HDC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엔씨→백술) ▲석면(조합→다원·지형이엔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이 다.

최이슬기자



공공행정 인력 확충하라

2023년 임금 7% 인상과 인력감축 중단 및 공공행정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마주 오던 열차와 '손 인사' 기관사들 징계 '안전운전 소홀'

이들 본 승객 기관사 '안전 의무 안 했다' 민원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한 기관사들이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 수많은 승객을 태운 전동열차에서 기관사들의 이 같은 행동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방 기관사와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씨에 대해 해당 본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3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한역사에 열차를 정차했다. A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씨를 보고 오른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이를 본 B씨도 A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기관사들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기관사들의 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손 인사는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상대 차선에서 마주하

는 동로 기사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거나 손 인사를 하는 경우를 승객들은 종종 볼 수 있어 승객들은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이 같은 행동이 일종의 관례로 여겨왔다.

이에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이 같은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따라서 공사 감사위원회는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이들 기관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코레일은 전동열차에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상황에서 기관사가 운전대를 끝까지 잡지 않고 손 인사를 한 것은 안전운행 소홀, 즉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도권 광역본부에 두 기관사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본부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들 기관사들에게 징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덕우도 비상구급함' 설치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생일면 덕우도 경로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일반 상비약 8종 및 외상처치 물품 등이 포함된 "비상구급함"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광양소방,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간담회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폭염과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강·계곡 등지에서 물놀이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경남 하동소방서와 전남 광양소방서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담양소방,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창평시장, 곡성기차마을시장, 옥곡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장흥소방, 공사장 및 작업장 관계자 화재예방 교육 실시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지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소방, "갑질 날리는 부채 제삭"으로 부패없는 공직자 실현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반부패 청렴대책 특수시책으로 "갑질 날리는 부채 제삭 배부 및 결의대회"를 가져 일상 속에서 갑질, 성비위 등 중증비위 예방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보성경찰, 벌교농협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성 벌교농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보성=김덕순기자